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없앤다

전주시, 행안부 공모 선정 국비 4878만원 확보

사고다발지역 실태조사·안전지킴이활동 등 추진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 전주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찾아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자전거 교통 위험지역 실태조사 인건비 2,878만여원과 정비 사업비 2,000만원 등 총 4,878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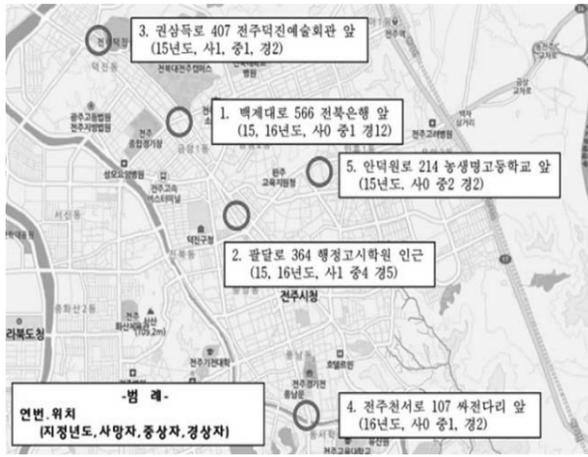
이에 따라, 시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을 통해 자전거 교

통사고 위험 다발지역으로 분류된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와 도립국악원, 팔달로 행정고시학원, 전주농생명고 앞, 싸전다리 부근 등 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태 조사결과를 연말까지 사고위험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지정 현황>



전북 첫 '미투' 극단대표 '법정구속'

극단 여배우들 추행 혐의...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형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미투(Me too) 사건과 관련, 지역 유명 극단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아동·청소년

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감독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또다른 이면'

선량한 보험가입자 사기범 내몰릴 가능성 커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2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수역원을 부정수급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사무장 병원에 입원, 보험금을 타낸 속칭 '나일롱 환자' 수백명이 경찰에 적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사기 색출 분위기에 예상치 못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사기꾼으로 지목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법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고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8월 친구 B씨와 완주군에 한 펜션으로 여름휴가를 갔다. 펜션에는 수영장이 있었고 두 사람은 물놀이를 즐겼다. 그러다가 B씨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B씨는 A씨를 뒤에서 들어 올린 뒤 곧장 물속으로 던져 버렸다.

이때 A씨의 얼굴에는 평생 함께 해야 할 상처가 생겼다. 수영장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왼쪽 눈 윗부분이 함몰되고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국가배상법상 장애진단을 받았다.

그때 B씨가 손을 내밀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상실수익액 같은 개념을 따져 보험사에 80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보험금이 아니라 경찰 조사였다. 보험사가 두 사람을 보험사기로 경찰에 진정할 것이다. 보험사는 이들이 짜고 부정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억울함에 하루하루가 초조했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흉터도 서러운데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물에서는 그 정도 상처가 생길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병원 진료기록이나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기까지 402일이 걸렸다.

검찰 처분 뒤 A씨는 보험금을 모두 수령했다. /뉴스



고령자친화기업 '도바기돼지' 개업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호춘)은 22일 전주시 관계자와 시·도의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본부장, 전주지역 기관·단체장,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전주도바기협동조합 '도바기돼지' 개업식을 가졌다.

완주서 트럭과 승용차 충돌

22일 오전 11시36분께 완주군 운주면의 한 도로에서 K 트럭과 K5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K5에 타고 있던 A(75·여)씨가 숨졌다. 이어 K5 운전자 B(30·여)씨와 동승자 C(80)씨, 트럭 운전자 D(45)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뉴스

휴대폰으로 친구 등친 20대 송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친구를 등친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A(2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친구 B씨와 C씨를 속여 수십만원을 가로채고 돈을 빼앗기 위해 등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

전주시, 인도·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행위 대대적 단속

전주시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빼앗긴 시민들의 보행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인도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학교 앞 등의 불법주정차와 압제주차 퇴치를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은 시가

국제안전도시이자 국제슬로시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어린이 등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제공함으로써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다.

단속 주요대상은 △인도 위 차량 △건축선(미관지구)과 인도를 물고 있는 차량 △자전거 도로 위 차량 △모퉁이도로 주차차량 △횡단보도 주차차량 △버스 정류장 주정차차량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유예기간 없는 즉시단속을 할 예정이며, 완산·덕진구청 단속반을 수기특별단속체제(수기단속반 10개반 20명)로 전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또, 단속된 차량은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곧바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교통본부 소속 직원 20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추가 편성, 구정 단속반이 단속이 미치지 못한

지역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2회에 걸쳐 20만명 이상의 시민이 가입한 '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강력단속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입체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9년부터는 자전거 주행에 방해되고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하고 시내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는 등 즉시단속 강도를 높여간다고 밝혔다. /송호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